

재난(災難)과 비상진료대책

<대량 사고에 대한 구급대책>



글·김영민
서울소방방재본부 구급팀

□ 대량인명사고는 필연인가

수 천년의 역사가 불과 하루아침에 변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감히 그 섭리를 해부해 가고 있다. 신의 영역으로만 간주되었던 자연의 지배를 지금은 오히려 지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위험인가. 한번 시작된 자연에 대한 개발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마치 멈추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기라도 하는 듯 성난 물소처럼 미래를 향해 돌진을 거듭하고 있다.

고도의 성장은 이미 미덕이 된지 오래이다. 문명의 이름으로 푸른 숲과 초원은 야금야금 도시의 아가리 속으로 먹히고 있다. 생명의 끝이자 발원이라 할 갯벌의 초토화 작전이 계속해서 전개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개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도 하늘로 솟고 땅으로 파고드는 거대도시의 조형물들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녕 끝 갈데 모를 인간의 욕구의 발로인가 아니면 당연한 진보의 소산인가.

한편에서는 자연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대자연에 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그들은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개발이 가져다주는 성찬에서 항상 국외자요, 찬밥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안락과 풍요를 맛본 세대에

게는 사오정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은 안락과 풍요의 맛을 들인 이상 그 입맛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풍요와 안락은 또한 음식과 같아서 쉽게 물린다. 그래서 항상 좀 더 나은 음식점을 찾아 나서게 된다. 도심에다 도시가스배관을 묻고, 지하를 파서 철로와 도로를 만들고, 불에 타면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비상구를 막고 좁은 공간에 뒤엉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이런 행태들은 변질된 풍요와 안락의 다른 유형일 뿐이다.

거저 주는 것이 뒤 안에는 반드시 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반드시 희생물의 잔해와 소외의 찌꺼기들이 모이게 된다.

인간만큼 슬픔에 민감한 동물이 있을까. 인간만큼 평화를 애호하는 동물이 있을까. 포악하고 잔혹한 것을 인간만큼 싫어하는 동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사흘을 넘기게 되면 슬픔이 이미 슬픔이 아니다. 인간이 평화를 애호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내재된 자신, 즉 인간에 대한 증오의 포악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은 혹 아닐까. 그 어떤 동물도 인간만큼 동족을 죽이거나 짓밟아 온 동물은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약일 수도 있다. 전쟁이 없다면 평화를 이야기할 건더기도 없다. 인간이 포악하고 잔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량함을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선과 악이 교차하는 세상. 이것이 본래의 세상 참 모습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잊어버릴 때, 사태는 반드시 되풀이되

며 그 피해의 몫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되풀이되는 재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는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구지하철방화참사는 또 일어나고 말았다. 누군가 말했듯이 압축된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희생이 크고 손실이 방대하여 한 말이다.

□ 사태의 수습은 생명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가 동일하고 추구하는 문명의 방향이 일정한 한 결론은 자명하다. 어쩌면 범죄와 재난은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도시가스배관이 폭발하면 큰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 위험시설물을 우리는 도심 지하를 관통시켜 심어 놓아야 한다. 건물이 하늘로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사고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그러나 인간은 우러러보는 것보다 내려보기를 더 원하는 걸 어쩌랴. 땅속을 혹은 하저를 매일 관통하며 살기를 누군들 원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삶의 속도를 만끽할 수 없는 걸 어쩌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조형물 속에 뇌관과 심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우리에게 갇혀 있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실수 혹은 사회의 범죄가 결합할 때 재난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내동댕이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듯이 문제는 예방만으로

로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차선이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은 이미 제공되어 있으며 우리는 사태발생 이후를 걱정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관점은 다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생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대량인명 사고로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지불하고도 얻어낸 교훈이 별로 없다. 아니, 교훈은 충만했으나 우리는 이를 예의 주시하지 못했다. 사태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나친 흥분과 대중에 대한 분노 부추기기, 책임자 처벌하기에 급급하여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원인은 실종되었으며 대안은 부처마다 산재할 뿐 한번도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아무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 의한 사태를 직시하여 판단하고 하는 종합적 마인드 차원에서 교훈을 찾는데 실패했다.

실례로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접근성과 사명감에 의한 기술적 전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의료적 전문성은 고려하지 못했다. 알고 보면 인명구조활동 그 자체가 의료행위라는 측면을 간과하여 온 것이다. 부상자를 어떻게 신속하게 구조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지금 부상자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아니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문제이며, 병원에 이송하는 것은 신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응급처치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여 왔던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대량인명사고 현장에서의 구급활동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부상자를 최초로 어떻게 응급 처치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는 물론 이후 장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량인명사고 현장에서의 구급활동은 준 의료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사의 지시와 판단에 의해 구급활동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1993년 성수대교붕괴 사고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되어 온 대량인명사고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 그리고 신속한 병원이송 그 자체의 실현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사후에 그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완쾌되었으며, 어떤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해 아예 관심조차 가질 수 없었다. 혹은 초기 응급처치를 어떻게 했으며 그가 어떤 치료를 받아 지금의 장애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맹목적인 인명구조와 관행적인 구급활동의 여파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초기 현장지휘에 실패한 연유도 연유려니와, 전문의료진을 구성하는 것부터 부상자의 증증도에 의한 분류,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이송병원의 지정 및 절차 등이 아예 없거나 무시되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행태는 이후 재난현

장에서도 계속하여 되풀이되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진이 참여하지 않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한 것이다.


대량인명사고 현장에서의 모든 구조 및 구급활동은 철저하게 전문의료진의 자문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행 재난관리법 상에 보건행정이 관여하고 적극 개입하여 협조할 영역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전문의료정보는 물론 적극적인 의료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배타적 관료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방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보건행정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혜택에 따라 보건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한 밤중에 가족의 일원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져 갈 때, 누군가 달려와 병원으로 이송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시행해야 할 가장 원초적인 복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비상성을 가진 소방에서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선의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적극 협조하고 지원했다면 문제는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소방에 의한 보건행정 침해로 여기고 별도의 129(사설 응급이송단)를 만드는 등의 배타적 정책을 수행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국가행정 영역은 종래와 같은 배타적 영

역 구분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화재라고 해서 소방만이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테러라고 해서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다. 복잡적이고 유기적 관계에서 상호 협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부처와 관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소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급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건행정의 목적인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달성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구급활동 및 걸음으로 보여주는 임무수행이 아니라, 대량인명 피해사고시 현장에서의 구급대책이란 보건행정의 지도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각 부처 및 기관 등의 노력과 의지가 부합되는 참여 없이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2003